
농림축수산물식품정책

토론회자료

2017. 5. 24

사단법인 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

농림축수산식품정책
토
론
회
자
료

2
0
1
7
·
5
·
24

(사)
농
식
품
·
농
의
축
특
별
포
럼

☐ 목 차 ☐

☐ 토론회 개최계획	1
☐ 발표자료	3
○ 기초발제	5
- 농림축수산식품 및 농어촌정책	5
○ 주제발표	9
1. 신정부의 농업정책 추진 방향	9
2.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25
3. 수산업을 미래 안정적인 식량 산업화	41
4. 4차 산업과 식품산업 미래	51
5. 국제농업협력과 남북농업협력	67



농림축수산식품 정책 토론회개최 계획

- 일시 : 2017. 5. 24. 14:00 ~ 16:30
- 장소 : aT센터 3층 세계로움(중) 1실
- 주최 : (사)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 농수축산신문 공동주최
- 주제 :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림축수산식품 정책

- 세부계획
 - 개회식(14:00~14:20)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개회사 : 이상무 (사)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 상임대표
 - 축사 : 최규성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축사 : 전정희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 주제발표(14:20~15:50)
 - 기조발제(10분)
 - * 농림축수산식품 및 농어촌정책 : 이상무 (사)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 상임대표

 - 주제발표(80분 각주제별 15분)
 - * 신정부의 농업정책 추진 방향(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
 - *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이병기 협성대학교 교수)
 - * 수산업을 미래 안정적인 식량 산업화(김종만 한국아쿠아포럼)
 - * 4차 산업과 식품산업 미래(박형우 한국포장학회 회장)
 - * 국제농업협력, 남북농업협력(최용규 세계농정연구원 이사장)

 - 종합토론(16:00~16:30)



발 표 자 료



기 조 발 제

농림축수산식품 및 농어촌정책



농림축수산식품 및 농어촌 정책

농식품 농어촌특별포럼
이 상 무

fppt.com

농림축수산식품 및 농어촌정책

1. 농정체계 확립으로 농어업 새 환경 적극 대응
2.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활력 회복
3. 환경과 농산촌의 지킴이 산림을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터전으로

fppt.com

농림축수산식품 및 농어촌정책

4. 축산업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화
5. 수산업을 미래 안정적인 식량 산업화
6. 식품산업은 대한민국 생명산업
7. FTA, 국제농업협력, 남북농업협력

fppt.com

감사합니다

fppt.com

주제발표 1

신정부의 농업정책 추진방향



신정부의 농업정책 추진 방향

2017. 5.

김 동 환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0

목 차

1. 농업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비전
2.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모색
3. 중점 농정 추진 과제

1

1. 농업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비전



1.1.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FTA 등으로 시장개방

- 수입 과일 확대 등으로 외국산 농산물과 무한 경쟁 시대 돌입
- 식품 자급률 저하, 먹거리 안보(food security) 에 대한 우려
- 식량자급률 50.2%, 곡물자급률 23.8%

인구의 고령화

-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농촌 인구의 초고령화 가속화(65세 이상 38.5%)
- 농가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4차산업 혁명의 대두
- 첨단 기술 수용으로 농업의 첨단화가 진전되고 기계화, 자동화로 정밀 농업발전

경제의 저성장 기조

- 경제 저성장으로 국가예산 증가율 저하
- 복지 및 일자리 자원 소요가 증가됨에 따라 농어업 예산 확보 어려움

1.1.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지구 온난화 문제 및
환경 문제 대응

- 기후 변화 대응 태세 확립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의 중요성 확대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 상존

- 중장기 :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국제 곡물가 상승 전망이고 동북아 정세 혼란으로 식량안보 문제 대두 가능성
- 단기적 : 가뭄, 홍수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

남북한 경제 교류 확대

- 향후 남북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반도 전체의 식량 수급이 이슈 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 의식 및
가치의 변화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및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
-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 완화

4

1.2. 농업의 새로운 비전

농민만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 안정적 제공
- 제2인생을 펼치는 공간으로서 농업, 농촌
-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 농업 재인식
- 도시농업, 주말농업 등으로 국민과 친숙한 농업

녹색생명 산업 및
국토관리자로서의 농업

- 국민에게 휴양 공간 제공 및 치유농업(사회적 농업)
- 환경 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 환경부하 경감

남북 교류에
대비한 농업

- 북한 인구까지 고려한 식량 수급 정책 고려

농업의 6차 산업화

- 단순한 농업에서 가공, 유통, 외식, 관광 등과 연계로 농가 소득 기회 제고

세계 속의 글로벌 농업

- 적절한 식량자급률 유지를 전제로 식량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 추진
- 수출 농업 육성

5



2.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모색

2.1. 지난 농정에 대한 반성

-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식량자급율의 지속적 저하 및 농가 소득 정체
- 지나친 정부 주도형 설계 농정으로 농업인의 자율적 발전 저해
- 보조금 등 지원책 위주의 농정으로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 유발 및 시장 왜곡 현상 반복
- 쌀 농가 소득보전 위주의 직불금 정책으로 품목간 형평성 미흡 및 쌀 과잉 초래
- 중앙 정부 위주의 정책으로 지역적 특색을 가미한 지역농업 발전 정책 미흡
- 정부가 농산물 수급을 지나치게 주도함으로써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 미흡
- 농정추진 기관의 난립 및 기관간 업무 조정 미흡으로 농정의 효율성 저하

2.2. 농정 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소농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전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
 - 영세 소농: 소득보전 및 복지지원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
 - 전업농: 기술개발, 컨설팅, 자금 공급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제고
- 지나친 정부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자율적 역량 강화로 발전 도모
- 중앙정부의 설계식 농정에서 지역의 자율적 농정으로 전환
 - 단 지자체의 농정 기획 및 수행 능력 배양과 지역간 과당 경쟁을 조정할 장치 필요
- 농어촌의 환경 및 경관 보존, 환경지향적 정책 강화
- 쌀 위주 정책에서 밭 농업의 균형적 발전 추진
- 정책간 연계성 강화로 농정의 효과성 극대화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학교, 농수협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정책 지원체계 확립

8

2.2. 농정 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

2. 농업의 새로운 비전 및 농정 개편방향

<농정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주도형 농정	민관 협치 농정
경쟁력 강화 및 가격 안정화 정책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 병행
피동적 객체로서의 농업인 육성	자발적 발전역량을 갖춘 농업인 육성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위주 농정	직접 지원보다는 교육, 컨설팅, 제도개선 등 간접 지원 위주
중앙정부 사업 위주의 수직적 연계체계	지역별, 조직별 수평적 연계 체제 강화
농정 추진기관의 난립	농정 추진기관의 정비 및 기관간 협력 강화
농업과 식품산업의 2분법적 접근	밸류체인이 연계된 6차산업적 접근

9

2.3.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

<농식품·농어업위원회 설치>

- 식품 및 농업, 농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업위원회 설치 운영
 - 현재의 식품, 농업, 농촌의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이 관여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이들 조직에 산재해 있는 식품, 농업, 농촌 관련 업무의 통합, 조정 기능이 필요함.
 -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협치(governance) 구조 필요
 - 농식품 농어업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삶의 질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식품 및 농업, 농촌관련 정부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화
 - 주요 역할로는 3~5년 단위 농식품, 농어촌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정책성과 평가를 수행
- 농식품·농어촌 특별위원회의 기능
 - 식량의 안정적 조달 체계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 식품관련 정보 제공 확대(안전성 및 영양정보 포함), 공정한 식품 시장 질서 유지, 식량의 안정적 조달 체계 구축
 - 식품안전성 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식품안전관리 기관의 기능 조정, 식품안전관련 정책 수립,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 국민영양, 식생활 개선
 - 국민 영양조사 및 식교육, 저소득층의 영양 관리 등 영양안전망(nutrition safety net) 구축, 비만예방, 건강식품 확대
 - 친환경,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및 농촌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식품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포장 개선 등 자원절약, 쓰레기 절감 대책 수립 등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정주권 및 농촌산업개발 등 농촌개발
 - 농촌의 주거, 의료, 교육 여건 개선 및 상향식 농촌개발 정책 추진

10

2.3. 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

<품목별 전국위원회 설치로 자율적 농정 추진>

- 현재 정부가 품목별 발전대책 및 수급조절을 주도함으로써 생산자의 자율적 발전 및 수급조절 체계 미구축
 - 정부 주도적 품목 발전 대책 및 수급조절은 시장 왜곡 문제를 발생시키고 정책의 효과성도 미흡
- 현재 농협의 품목별 협의회, 각종 협회, 품목연합회, 자조금 추진 위원회 등이 전국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통합 및 조정 기능 취약
- 난립되어 있는 각종 전국 조직을 품목별로 통합하여 단일 조직으로서 자율적 품목 발전대책과 수급조절 시스템을 갖추
 - 전국조직의 하부조직으로서는 농협, 농업법인 등과 그들의 지역별 통합마케팅 조직 등이 되고 이들의 연합체로서 전국조직 결성
 - 품목별 전국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고 품목별 발전대책 및 수급조절 대책 수립하고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자금 지원 기능 수행
- 품목별 전국 위원회의 기능
 - 품목별 발전 대책 수립(국내 소비 대응, 수출확대, 경쟁력 강화, 생산비 절감 등)
 - 품목별 수급대책
 - 지역간 경합 조정
 - 자조금 사업 관리 및 소비촉진 사업 추진
 - 표준화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
- 품목별 전국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 마련

11

3. 중점 농정 추진 과제



중점 농정 추진 과제

- 1 쌀 생산 구조조정 및 식량자급을 제고
- 2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보조제도 및 공공급식 도입
- 3 농가 기본소득 개념의 직불제 확대
- 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 5 후계 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 6 주요 품목의 가격폭락에 대비한 소득안정제 도입
- 7 산지농협 유통사업의 개혁 및 품목조직 육성
- 8 농축산물 거래에 있어 불공정 행위 감시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 9 친환경적인 농축산업 육성

3.1. 쌀 생산 구조조정 및 식량자급율 향상

-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하고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쌀을 타 곡물 및 사료작물로 전환하는 정책 확대
- 이상 기후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곡물 생산이 불안한데 반해 농산물의 국제적인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식량 자급율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낮은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을 밀, 대두, 사료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지급 확대(쌀 생산조정제 확대)
 - 사료용 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다수확 쌀 품종 개발 및 보급
 - 밀, 대두와 같은 곡물의 품종 개량, 영농 기술 개발 등으로 생산성 제고
 - 유휴지 및 휴경지에 사료작물 등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특히 강변 둔치 등)
 - 사료용 곡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료작물 재배 확대 및 조치 조성
- 논에 대두 등 식량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배수 시설 설치 등 기반 정비가 필요함
- 경축 순환농업체계 구축으로 사료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율 향상

14

3.2.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보조제도 및 공공급식 도입

- 국민 전체의 식량안보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보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임
- 먹거리 확보라는 국민 기본권 보장,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공급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질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정성(food security) 미충족 가구 비율은 8%이며,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도 14.2%에 이룸
 - 식품안정성 미 충족 가구 :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한 가구
-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취약 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식품보조제도(Food Stamp)를 도입
 - 미국에서는 빈곤퇴치, 영양개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식품구매지원(푸드스탬프) 제도를 196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 전체 예산지출의 68%가량인 2,090억 달러가 푸드스탬프, 학교급식 등에 투입되고 있음
- 초고령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급식 확대

15

3.3. 농가 기본소득 개념의 직불제 확대

현행 정책의 문제점

- **현재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 약 14%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
 - 현행 직접지불제도: 쌀소득보전, 친환경, 경관보전, 경영이양,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조건불리지역, 발농업,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 등
-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
 - 쌀 위주로 원예 및 축산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하지 못함
 - 쌀에 연계되어 쌀의 과잉 생산 유발
 - 논 면적이 큰 대농에게 많은 직불금이 지불되어 소득재분배 왜
 - 직불금의 상당액이 농가에 귀속되지 못하고 지주에 귀속
-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제도의 한계**
 - 정부가 도입하려는 수입보험제도도 소득파악이 어렵고 보험가입율이 낮은 상태에서 농가 전체의 소득 안정 대책으로는 미흡
- **재해보험 등 소득안정장치가 부족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이 큼.**
-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28.3%가 최저생계비 미달할 정도로 소득이 낮음**

16

3.3. 농가 기본소득 개념의 직불제 확대

- **쌀소득보전직불, FTA 피해보전직불, 발농업직불 등을 통합하여 농지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에 대한 보상성격의 직불제도(기본 직불제)로 전환하고 직불금 단가 인상**
 - 기본 직불제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원용하여 품목과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균등하게 지급하여 영세소농의 지속가능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직불금은 취미농을 제외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지급하고 면적 상한선도 두어 영세농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
 - 전업 농가의 소득안정은 직불금 보다 재해보험 및 가격안정제도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보전, 경관 및 농촌사회 유지,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도(가산 직불제) 확대**
 - 현재의 환경보전,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확대 개편하고 준수 의무(cross compliance) 강화

17

3.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 농업을 4차산업 혁명에 접목하여 전 과정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지능정보형 농업으로 전환 필요
- IT,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생산,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 시설농업의 생산 정밀화 및 자동화, 동식물 환경, 생태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유통에도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 ICT 기법을 도입하여 유통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을 첨단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R&D 투자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함
 - 농식품부 R&D 예산을 증액하되 R&D 기획 관리 및 평가 기능 강화
 - 특히 R&D 총괄적 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연구비 낭비를 철저히 방지해야 함
 - 기술 개발 시 연구기관, 대학, 농기업,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현장 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 확대
 - 국가연구비의 일부를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농업인 및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4차산업 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교육 강화
- 대규모 전업농뿐 아니라 소규모 영세농에도 적용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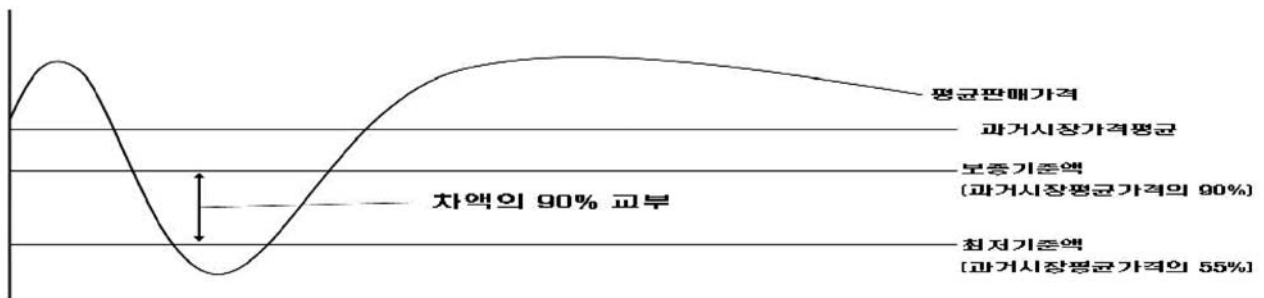
18

3.5. 후계 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 귀농 희망자 및 후계인력에게 농업지식,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농업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 취득자에 농지구입 자금 등 투자비 및 일정 기간 생활비 지원
 -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계자에 지원 집중하고 일정기간 생활비도 지원(일본은 신규 농업취업자에 연간 150만엔을 7년간 지급)
 - 단순한 자금 지원 위주에서 후계인력 및 귀농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영농 성공률 제고
-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인드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 유입되도록 벤처 농업 등을 육성
- 기존 가족농 위주의 전업농 육성 정책을 확대 발전시키되 가족농의 규모화와 법인화 등 성장 여건 확충
 - 전업농은 축산, 과수, 특용작물 등 부가가치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며 품목별 조합 등으로 조직화하여 산업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영체를 육성.
 - 이에 반해 영세소농은 농업 자체로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없고 노령화되어 있어 단순히 생산적 시각에서만 접근하기 어려워 마을 단위 조직화를 통해 농업생산은 물론 6차 산업을 통한 소득 기회창출, 복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법인의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기능 강화 및 전문 CEO 양성
- 물적 담보가 없어도 농업경영체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금융방식 개편
 - 사업 평가 방식에 의한 벤처캐피탈 형식의 자금 공급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투자 방식 도입
- 농업부문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제도 개편
 - 인구 과소지역 혹은 낙후지역에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이 농어업 및 농어촌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단 기존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3.6. 주요 품목의 가격폭락에 대비한 소득안정제 도입

- 현재 일부 채소에 대해 가격 급락시 5년간 평균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대신 수급관리에 협조하는 “생산안정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가격 변동성이 심한 품목에 확대
 - 생산안정제 참여농가는 50%의 물량에 대해 사전적 수급조절에 응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준 가격 보장
 - 현재 무, 배추, 양파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중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생산 안정제는 농가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전제로 해야 하며, 수급조절 유무에 따라 가격보장액에 차등을 두어야 함.
- 일본에서는 지정채소에 대해 과거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기준액을 설정하고 평균판매 가격(도매시장가격)이 보증기준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현재는 90%)를 사업참여 농가에게 가격차 보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0

3.7. 산지농협의 유통사업 개혁 및 품목조직 육성

- 농수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생산자가 영세하고 분산되어 효율적인 유통체계 도입이 어렵다는 점임
- 기존 지역농협 체제를 유지하되 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협이 출현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협 설립의 진입 장벽 완화
 - 품목별로 경제 사업에 전문화된 품목별 마케팅농협(marketing cooperatives)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한 철폐 및 순수 품목농협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기존 지역농협의 합병, 폐쇄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경영적자 보전 방식의 조합 지원 제도 개선
- 지역농협의 판매사업을 보완할 품목조직의 육성이 필요함
 - 품목조직은 농협, 영농법인 가릴 것 없이 효율적인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과 퇴출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유통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큰 상인들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조직화하여 품목조직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유도
- 농가조직화의 출발은 계약생산/공동계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계약생산/공동계산 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지역별, 전국 단위의 연합마케팅 추진
- 전국단위에서는 민간 주도의 품목별 전국조직(위원회)을 구성케 하고, 전국조직이 자율적으로 품목관련 발전 대책 수립 및 수급조절 정책 수행(마케팅보드)

21

3.8. 농축산물 거래에 있어 불공정 행위 감시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농산물유통에 있어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 감독 기능 강화
 - 현재 대형유통업체는 PB상품 확대, 물류비 전가, 잦은 세일, 납품가 인하압력 등으로 산지 압박
-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 거래는 물론 농업인과 상인과의 거래 등 거래전반에 있어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 확충
- 민간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유통참여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중추적인 농산물 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확대 등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3.9. 친환경적인 농축산업 육성

- 유기 및 무농약 인증농가 확대 및 학교급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판로 확충
- 가축분뇨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 확대
- 지역단위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 을 구축하고, 경축순환농업 및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강화
-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및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 동물복지 인증제도 및 지원 확대
-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식문화 개선 및 포장 단위 개선
 -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방안 모색
- 생산, 유통과정상 불필요한 비용 절감
 - 농산물 유통마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비 절감 대책 마련
 - 포장 단순화와 재활용 포장재 사용 확대
 -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수송비 등 절감 방안 수립, 시행
 - *푸드마일리지 절감으로 친환경 물류체계 도입



주제발표 2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2017. 5. 24

이 병 기
(협성대학교)



Contents

- I. 농어촌지역 문제의 실상
- II. 현행 농어촌정책의 문제
- III.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접근 방향
- IV. 농어촌 정책의 세 접근 틀
- V. 맺는 말



I. 농어촌지역 문제의 실상

- 1. 농어촌지역 문제의 현 주소
- 2. 농어촌문제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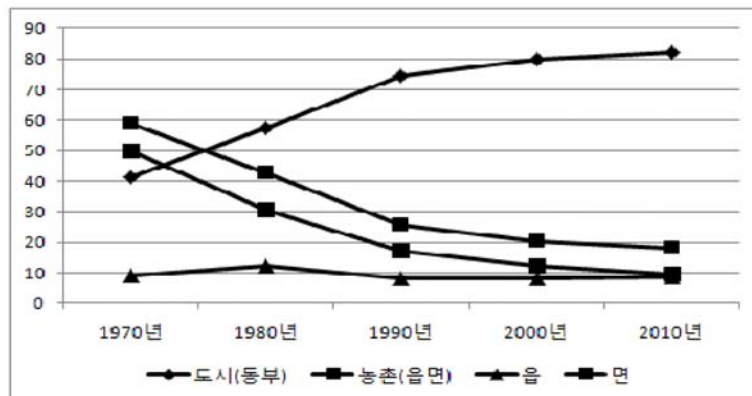
1. 농어촌지역 문제의 현 주소

1) 농어촌지역 인구의 지속적 감소

● 농어촌인구 급감

- (1970) 58.9% → (2000) 20.3% → (201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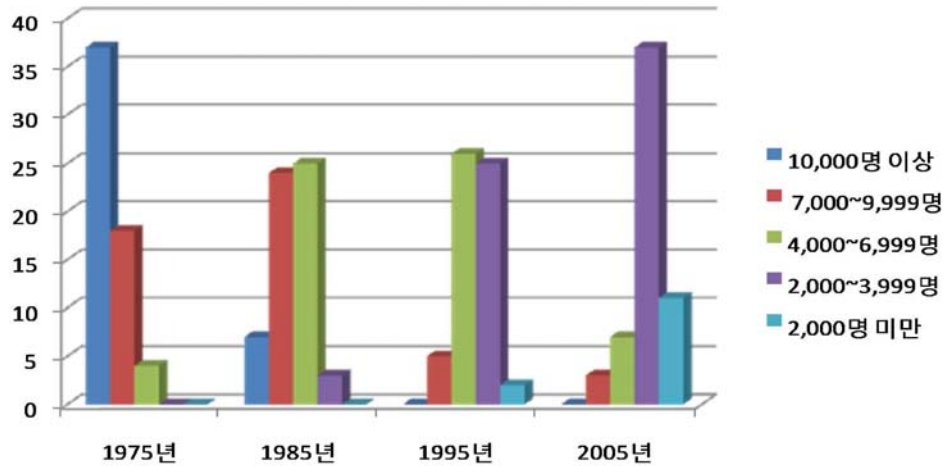
도시·농촌 인구비중 변화 추이



● 농어촌지역의 기초 정주공간인 면지역 인구 급감

- (1975) 대부분 10,000명 상회 -> (2005) 4,000명 이하

사레지역 면 인구규모별 비중 변화 추이



2) 농산어촌지역 경제사정도 지속적으로 악화

● (1990년까지) 도·농간 소득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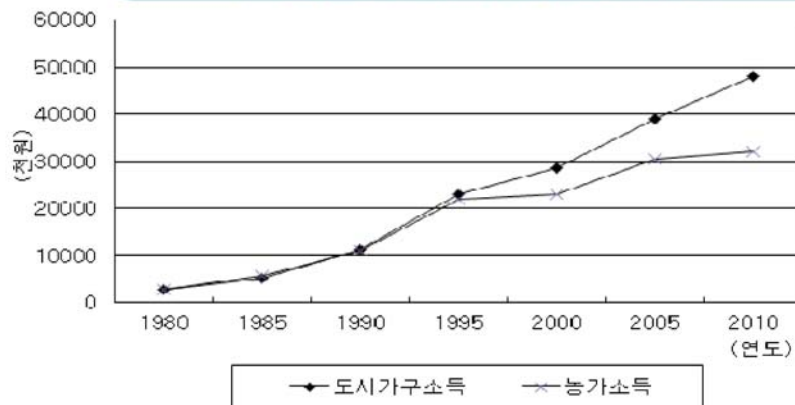
➡ (그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 :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최근 : 농어촌경제 사정 더욱 악화

-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

(2000) 80.6% ➡ (2010) 66.8%

도·농간 소득격차 변화 추이



3) 도·농간 생활편의 및 복지환경 격차 심화 : 농어촌 정주기반 붕괴

- 슈퍼마켓 · 편의점 없는 면 : 전체 읍면의 29.7%
- 초등학교 없는 면 : 전체 읍면의 24%
- 약국 없는 면 : 전체 읍면의 50.2%



4) 농어촌사회의 고령화 가속

- (한국) 선진국보다 고령화 빠르게 진행
- 농어촌지역: 2010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 7%~14% 미만
 - 고령사회: " 14%~21% 미만
 - 초고령사회: " 21% 이상
 -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20년 정도 앞서가고 있음



○ **농어촌 高齡家口의 경제사정 劣惡:**

- 2014년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의 38% 수준
(통계청, 2014년 가구당 금융복지조사결과)
- 도시 高齡家口의 70% 수준(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농촌고령가구의 소득수준(단위: 천원)

구분	2011년	2014년
전국	21,618	23,050
도시(동)	23,964	24,547
농촌(읍·면)	16,637	18,127



2. 농어촌 문제의 본질

- 문제의 근원 : 농어촌 경제기반 취약과 그 결과 초래된 농어촌 인구의 과도한 도시유출에서 비롯된 문제임
- 농촌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기회 제약 : 도시-공업부문의 강력한 농어촌인구 흡입에 무방비적으로 노출
- 그 결과 : 농어촌의 공동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
 - ➡ 농어촌시장 붕괴로 대부분 주민 편익 및 복지시설 퇴출되기에 이룸
 -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악화





농어촌 문제의 악순환과 가속화

- 저소득 및 생활편익 환경 열악
 - ➔ 젊은 사람 중심의 선택적 탈농촌 가속화
 - 농어촌 공동화 및 노령화 문제 심화
- 악순환 고리 단절 : 특단의 혁신적 대책 요구

농어촌의 붕괴

- 과도한 인구유출과 경제적 기반 위축으로 정주기반 붕괴
 - ➔ 자생력 상실
- 노령화 심화 : 농어촌 지역사회 - 지속가능하지 않음
 - ➔ 농어촌 미래 불투명

II. 현행 농어촌 정책의 문제

1. 농어촌문제의 소극적 인식
2. 정부 의존성 조장
3.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안목



1. 농어촌문제의 소극적 인식

농어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몇 가지 정책대안 과신

- 정책수단으로서의 일반성과 구체성에 대한 회의

→ 예) 농촌관광 효과에 대한 과잉 기대(일반화의 문제)
마을리더의 역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구체성의 문제)

농어촌정책 : 독자적 정책분야로서의 인식 부재

- 국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면서 묻혀버려 정작 독자적인 농어촌정책 영역 실종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11개 중앙부처에서 각각의 문제의식에서 정책입안 및 추진

- 농어촌정책 체계의 산만

→ 책임 없는 다양한 유사 정책프로그램 양산



2. 정부 의존성 조장

□ 선심성 정책 프로그램 남발 : 농어촌주민의 정부 의존성 날로 심화

- 전형적인 사적인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공적인 지원 당연시

→ 예) 묘목대금 등 직접적인 영농비용을 지급한다든가,
개인 사업장시설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등

- 마을에 대규모 커뮤니티센터 건립: 유지비용 없어 대부분 방치

□ 무분별한 복지의 늪에 빠져 주민의 자생력 상실

- 모든 것을 정부가 해 주기를 당연시하고 기대함

→ 예) 동절기 : 마을회관에서 기거한다든가
심지어 농어촌 공립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 개인적 노력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기대하는 경향 만연

→ 예) 정부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에 오히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 확산





3.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안목

- ☐ 정책시야의 협소 : 농업중심적 시야에 머물고 있음
 - ➔ 예) 복합산업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 ☐ 피상적 정책인식 : 기업의 농어촌 입지 회피가 근본적 문제인데
 애써 외면하면서 임기응변식 정책을 남발
 - ➔ 예) 이벤트성 농촌관광, 대규모 숙박 도농교류센터 신축 등

- ☐ 정책프로그램 남발에 따른 투자 분산으로 정책효과 반감
 - MB정부들어 유사사업 통합하여 포괄보조금 지원
 - ➔ 210개 사업을 24개 사업으로 묶었으나 기존 사업이 여전히 그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Ⅲ.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접근 방향

1. 성장 동력의 능동적 도입
2. 내발적 개발역량의 극대화
3.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접근



1. 성장 동력의 능동적 도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향적 접근

■ 현 농어촌정책 : 편트가 잘못 맞춰져 있음

- 농어촌 문제의 근원 : 과도한 인구기반 위축에서 비롯
 - ➔ 인구기반 위축 : 농어촌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
 - ➔ 일자리 부족 : 기업의 농어촌지역 입지 외면에서 비롯
- 현 농어촌 정책 : 현상적 문제만 바라보고 있음
(생활편의 및 복지환경 열악, 저소득문제 등)

■ 농어촌 스스로의 개발잠재력 기대하기 어려움

■ 농어촌개발의 새로운 전략 : 적극적 기업유치노력에 역점

- 소규모 기업 대상의 농공단지 정책은 전향적으로 전환
- 입지자유도와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대기업 중심 유치방안 마련
- 기업의 농어촌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 강구

2. 내발적 개발역량의 극대화

■ 상향식 개발원리의 실현

- 개발노력 : 외적 지원보다는 내적 동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점
 - ➔ 외부의존적 개발방식 불식: 자주, 자조방식 채택

■ 농어촌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시스템 구축

- 농어촌 주민 : 실질적인 개발의 주체세력으로 자리매김
 - ➔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의 발전문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도 부여
- 지방정부의 역량 및 책임의식 제고
 - ➔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권한 전폭적으로 이양

3.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접근

계획적 안목에서 접근

- 다양한 차원의 농어촌개발 수요를 ‘계획이란 틀’ 속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종합적 안목에서 접근

- 농업중심의 단편적 시각으로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는 농어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비농업경제활동 증진과 생활편익 및 복지환경을 포함하는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 접근 요구

도·농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

- 도시적 편익서비스의 대부분을 중심도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생활거점인 중심도시와 연계된 생활권 단위로 농어촌계획 수립



IV. 농어촌 정책의 새 접근 틀

1. 농어촌계획법 제정
2. 농어촌지역 기업유치 지원특별법 제정
3.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1. 농어촌계획법 제정

- ☐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산, 들, 물, 길, 촌락, 소도움을 아우르는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전면적 재 디자인
 - 현실: 도시편향적인 국토계획법에 농어촌계획 의존
(농어촌: 비도시지역으로 정의
 - > 농어촌: 나머지지역에 다름 아님
 - 적극적이고 합리적 농어촌개발 기대하기 어려움
 -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한 과감한 토지이용 인센티브 제공
 - 보전중심 토지이용시스템->균형잡힌 농어촌개발 유도
 - > 실효적 농어촌계획 수단 강구
(예: 경관보전을 전제로 고밀도 개발 제한적 허용 등)
 - 합리적 농·산지 보전 및 이용방식 및 절차 제시

- ☐ 농어촌계획의 합리적 모형 제시
: 젊은 여성들도 살고 싶어하는 매력있는 삶의 장소로 가꿈
- 도농통합적 시각에서 농어촌의 미래 청사진 제시
 - 읍 및 거점면 : 주민 생활편익 및 복지 거점으로 적극적으로 육성
 - >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 및 여가시설 확충,
공공의료서비스시설 확충 및 스마트의료시스템 구축,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조 재검토(순회교사제도 도입)
도시가스공급망 체계 순차적으로 구축
 - 최소한의 불편없는 도시적 편익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고려하여 농어촌 정주체계 전면 재편 시도
 - > 생활권의 거점인 읍.면 중심지로부터 소외되는 마을이 생기지 않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2. 농어촌지역 기업유치지원 특별법 제정

■ 성장동력의 능동적 도입

- 농어촌지역의 기업입지불리성 극복 : 충분한 지원방안 강구
- 기업 : 강력한 도시집적 성향 → 농어촌지역 입지 회피
 - 조세감면, 재정 및 금융지원, 외국인노동자 우선배정, 공장부지 제공 등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방안 마련

■ 대표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

- 대표기업 : 입지자유도 상대적으로 높음
 - 강력한 전후방연관효과로 연관기업들 입지 유인
 - 예) 기업 스스로의 입지부지 개발 및 이용권한, 계열기업 입주단지 개발 및 분양 권한 등 부여

■ 한국기업의 탈 한국 러쉬 흐름을 농어촌으로 유도하는 데 역점

- 해외투자 건수(2010년까지): 중국 41,620건, 미국 18,930건



3.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 생산적 복지시스템 마련: 고령자 복지기반을

마을공동체 속에서 구축

- 老-老 케어시스템 도입 및 노인들의 마을 내 영유아보육기능 담당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

■ 농작업재해보험 제도의 전면적 실시

-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를 통합하여 농작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
- 농부중 환자도 농작업재해보험의 수혜대상에 포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제도에서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농어촌특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V. 맺는 말



농어촌문제 심각성 가중 :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음

● **2010년 20,000명 미만 군 출현**

구 분	2000년	2010년
경북 영양군	20,735명	16,540명(△20.2%)
경북 군위군	28,747명	19,993명(△30.5%)
전북 장수군	23,316명	19,424명(△16.7%)

주) 울릉군 제외

- **농어촌 노령화 심화(농어촌 기초마을 사례 : 경북 영덕군)**
 (현재 : 2008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 70%
 (10년 후 전망)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 80%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 50%



☐ 사회적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

- 농어촌 : 국토의 나머지 공간으로, 농업생산공간으로만 인식

➡ 이대로 방치: 농어촌의 자연적 소멸

- 농어촌 : 소중한 국토공간으로 잘 가꾸고 활용해야 할 대상

➡ 엄청난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농어촌 가치에 대한 재인식

- 심각한 도시문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공간

: 좁은 국토 넓게 쓰는 지혜 요구되고 있음

-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

☐ 본 논의 : 농어촌 역시 지켜야 할 소중한 국토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농어촌 활력제고를 위한 전면적이고 전향적 차원의 농어촌정책 제안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3

수산업을 미래 안정적인 식량 산업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림축수산물 정책

수산업을 미래 안정적인 식량 산업화

2017년 5월 24일

한국아쿠아포럼 김 종 만

세계수산업 현황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ION AND UTILIZA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illion tonnes)						
PRODUCTION						
Capture						
Inland	10.5	11.3	11.1	11.6	11.7	11.9
Marine	79.7	77.9	82.6	79.7	81.0	81.5
Total capture	90.2	89.1	93.7	91.3	92.7	93.4
Aquaculture						
Inland	34.3	36.9	38.6	42.0	44.8	47.1
Marine	21.4	22.1	23.2	24.4	25.5	26.7
Total aquaculture	55.7	59.0	61.8	66.5	70.3	73.8
TOTAL	145.9	148.1	155.5	157.8	162.9	167.2

WORLD FISH UTILIZATION AND SUPPLY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

연도별 어업인구 추이 단위 : 인

연도	어업 가구수	어업 인구수	가구당 인구수
1985	126,802	602,237	4.7
1990	121,525	496,089	4.1
1995	104,480	347,210	3.3
2000	81,571	251,349	3.1
2005	79,942	221,132	2.8
2010	65,775	171,191	2.6
2015	54,793	128,352	2.3

☞ 가구당 인구수가 3 이하로 내려오면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 있다고 봄

연도별 어업생산량 추이 단위 : m/t

연도	합계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1985	3,102,605	1,494,514	787,571	767,030	53,064
1990	3,198,234	1,471,810	772,731	919,312	34,381
1995	3,348,216	1,425,213	996,451	897,324	29,228
2000	2,514,225	1,189,000	653,373	651,267	20,585
2005	2,714,050	1,097,041	1,041,074	552,096	23,839
2010	3,110,634	1,132,536	1,355,000	592,116	30,982
2015	3,342,247	1,058,316	1,672,739	578,137	33,055

☞ 2006년부터 천해양식생산이 일반해면어업생산을 추월함
☞ 2016년부터 일반해면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됨

'15년의 수산물 소비 : 51,722,903명(총인구) x 56.7kg/year/1인(소비량) = 2,932,687톤

수산업의 목표

수산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수산부국을 실현

- 20세기 후반, 우리 수산업은 세계유수의 수산국으로 발전하여 국민 단백질 공급, 수산물수출 등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 1960년대에는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원양어업과 수산물 전략 수출을 통하여 외화 획득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음
- 21세기에 들어 주변 환경 여건 변화에 의한 생산둔화, 수산업 기반의 붕괴 등으로 수산인은 상실감이 증폭되고 수산업의 경쟁력은 약화
 -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 국제무역자유화,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가진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여 다시 부강한 수산국으로 건설할 수 있는 "미래수산"의 방향을 제시

1

수산의 신개념을 정립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수산의 신개념을 정립하고 글로벌 수산 중심국가로 발전시킴

→ 생산, 바다와 어촌에서 수산인이 관여하는 무형(관광, 레저, 스포츠 등)의 수익도 수산으로 편입,

수산의 범위를 확대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창출

- 연구·가공·유통·수출을 연계한 지역특화 수산식품단지 확대
-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수산식품 기술지원센터 설치
- 수산물 가공 경영체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생산자단체의 판매기능 제고

- 지역별·품목별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확충하고, HACCP 구축을 통해 위생설비 확충
- 분산물류센터를 지원하고, 국제수준의 위생설비 및 저온물류시스템 구축

○ 국민이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

→ 양식장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수산물 안전·위생 강화

→ 수산물 안전성을 지속 확인·점검할 "수산물안전성평가원" 설립, 위해요소 지속적 모니터링

2

기후변화, 어장오염, 자원감소 등 수산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대책을 마련

○ 어떠한 천재지변에도 안전하게 양식과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수산현장의 경영 기반을 강화

→ 어선·어업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다목적 어항 보강·확충

→ 상습재해 양식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 전국 연안어장의 "어부림"조성으로 방풍효과와 산란장 조성효과를 극대화

○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전연안을 아쿠아벨트(Aqua-belt)로 발전

→ 전국연안을 바다 숲으로 조성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안을 조성

→ 환경친화적 어장환경 조성과 전 연안의 "자원벨트 조성"(자원조성, 목장화, 바다숲 등)

○ 국가적 차원에서 생태환경 조성 및 지속적 자원관리

→ 미래세대에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

→ 어업자원 관리체제 개편 및 기르는 어업을 통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 새로운 어업질서와 과학적 자원관리

→ 친환경 어구, 시설, 어선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지속가능 어업체계 신속 전환

○ 맞춤형 수산산업 육성으로 복지어촌 건설

- 어촌을 생산, 가공, 유통을 기반화 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젊은이가 살고 싶고, 도시인이 가고 싶은 복지어촌으로 재편**
 -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및 정착지원, 기술지원 등 종합 서비스 지원
- 아름다운 어촌을 생산과 연계한 **행복 정주어촌 건설**
 - 어업인 유입을 최대한 조장하고, 쉬어갈 수 있는 테마 개발
 - 지역주민의 협력과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특화어촌 개발**
- 세계적 어촌 테마마을 개발 육성으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어촌 조성**
- 국가는 농어촌 균형 발전, 국민은 휴식 공간, 바다는 풍요롭게, 어촌은 어업과 관광 **활성화**로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
 -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교류 지원으로 도시민의 어촌 관광 활성화 기여

3

안정적 수산식량 확보를 위해 양식산업과 어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시설을 현대화

○ 신개념 첨단양식 기술의 실용화

- 생산기반을 갖춘 **고부가 수산지식산업**을 창출하여 자원증식, 양식, 어업 등 지식기반 기업형 **고부가 산업으로 개편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
- 해역, 권역별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 연안을 균형 있게 새롭게 재편, 지속적 생산기반 조성**
 - 내만의 밀집된 양식시설은 정비하고, **생태형 복합양식장으로 유도**
 - **외해양식과 융복합 재생에너지 활용 양식**을 상업화
- **기술집약형 양식기술의 선진화로 세계시장을 선점**
 - 육상 친환경 고밀도순환여과식 **빌딩양식화**
 - **고소득 품종의 대규모 양식**을 위한 양식섬(단지) 조성
 - 심해와 풍력연계 양식으로 **고부가 기술 선도할 양식 플랫폼 조성**
- 어촌 관광형 **다영양 입체양식**을 확대 개발
- 세계적인 **'김 연구소'** 설립

○ 연근해어업의 규제 대폭 완화로 조업의 자율성 확대

- 연근해어업의 허가종류를 재조정하여 간소화하고, 어업 자율성 확대
 - 근해연안구획어업 3단계 어업허가를 전국·지역 2단계로 개편하고, 기업형 어업은 구조조정으로 정예화·첨단화
 - 연안어업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어업관리 추진
 - 시·도, 시·군·구 등 행정단위로 제한된 어업수역을 인접 지자체간 공동 이용 가능하도록 재편
- 어촌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생계형 어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어촌사회의 산업기반인 자가소비형 어선어업은 신규진입 허용
 - 귀어촌 지원을 위하여 마을어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
- 생산자단체의 판매기능 제고
 - 지역별·품목별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확충하고, HACCP 구축을 통해 위생설비 확충
 - 분산물류센터를 지원하고, 국제수준의 위생설비 및 저온물류시스템 구축

○ 어선 현대화를 통한 어선원 복지 향상 및 어선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래체계 개선

- 복지공간확보 통한 승선여건 개선 및 어선현대화 지원(장기저리 융자) 프로그램 추진
- 어선거래 정보 제공 및 어선리스제 도입
- 연안 및 근해어업 감축 선박 보상단가 인상

○ 내수면을 종합 개발하고, 생태목장을 조성

- 영세한 내수면을 친환경 양식단지로 육성, 새로운 수익원 창출
- 고소득 품종의 환경친화적 내수면 양식생산 시스템 조성
- 내수면 수계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 조화형 내수면목장 개발과 중점 육성
 - 자연생태 환경조성과 생태 조화형 시범 단지화
 - 댐, 저수지, 지천, 대형하천 등 유형에 따른 생태목장화 조성
 - 내수면 수계의 다목적이용 기술개발과 대상수역 선정, 자원조성 방안 강구
 - 매립간척 농업용지 및 유휴농지 활용, 고소득 양식단지 개발
- 수산물관상어산업(Aqua-Pet)의 체계적 기반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
 - “Aqua-pet 진흥센터”설립을 통한 관상어 산업화

○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를 확보로 국제적 수산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

- 해외 어장개발과 수산자원 미개발국의 수산물 생산 기지화로 고기능성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 해외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기술 확보와 지역 수산기구의 자원관리로 국제 수산정책을 주도
- 미개발 자원국의 수산자원 벤처 육성, 기업형 양식과 해외자원 공동 개발 및 이용 기반 확보
- 맞춤형 기술지원 및 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양식산업 해외기반 마련
- 국내 수산자원의 확보와 국제적 보호를 위한 대응으로 식량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적극 대처

4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를 개선

- 어업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관리 운영체계를 미래수산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
 - 어장관리 제도개혁을 위하여 현행 어장면허 제도에 따른 신규진입 저해요소를 개선하여 기술 진보형 개방적 수산업으로 전환
 - 양식어업에 기술과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 불법어업 효과적 감시를 위해 동·서·남해의 어업관리단을 확대 개편하고 해경과의 역할분담을 정립
 - 신규어장 이용자의 어장관리 실명제를 도입, 수산업 행위지역의 "어장공영제" 도입 검토
 - 장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식어장을 단지화 하면서 생태환경 구역으로 개선
 - 저가 품종에 대한 생산 집중을 억제하고,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
 - "양식생산량할당제"를 도입하여 어장별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총허용양식량을 결정
 - 어구실명제, 폐유 수거 의무화, 해양 쓰레기 투기 근절, 수산시설물 철거 등에 "실명제" 도입
 - 어구실명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수산자재 개발 촉진
 - 국가적 방제의 효율화를 위한 선도적 방제업체의 육성과 전문업체 "등록제"를 제도화

- 해양수산부 내 수산 정책 조직을 개선·강화하고, 투융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 미래 수산에 적합하게 수산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강력한 수산해양 기구와 수산기반 조성 조직을 설치
 - 수산·해양·환경의 통합 운영으로 산업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수산자원관리공단, 어촌어항협회, 수출입조합, 선박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분산된 수산기반 기능의 일원화로 효율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기반공사"를 설립
 - 양식기술 첨단화를 위한 정책기능의 확대 강화
 - 양식정책을 총괄할 실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첨단 양식기술을 선도할 예산을 확대
 - 수산의 특수성을 감안 대폭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타 산업에 우선하여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수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 수산인력 수급체계 확립
 - 수산업의 가능성 및 성공적인 수산경영인 사례 발굴·홍보
 - 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어촌 정착자 병역특례 제도 확대 등 "신규유입" 촉진 프로그램 개발
 - 어업인 후계자 자금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조기 정착을 돕고, 수산계 고등학교의 국립화 및 취업 지원
-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4

4차 산업과 식품산업 미래



4차 산업과 식품 산업 미래

2017.5.24
한국포장학회
회장 박형우
hwpark10@naver.com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한국 농식품산업 규모

- 매출액 164조원(2015)
- 종사자수 201만 명
- 업체수 66만 개
 - 2000년에 비해 200% 성장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식품산업 분야별 규모(164조)

투입비

- 식품가공분야 56.5조
 - 농산물; 17.2조
 - 축산물; 15.5조
 - 임산물 ; 0.6조
 - 수산물; 2.9조
 - 소맥류; 20.3조

외식: 83.8조

식품제조생산액

• 식품제조업 : 80조

- 식료품: 69.6조
- 육류가공,저장: 12.5
- 수산가공,저장: 4.7
- 과일채소가공,저장: 2.8
- 곡물, 전분 등: 5.7
- 빵,면류, 조미료,첨가물 등; 23.2
- 동물사료 등: 10.4
- 음료 : 10.4
- 알코올 : 5.4

국내 1차 농축산물

• 총 생산량 16,256 천톤+ 10,719천두

- 곡류 5,500천 톤
- 채소류 8,234천 톤
- 과일류 2,522천 톤
- 축산 10,719천 두
- 수산

6차 (가공)산업 활성화(??)

- 신활력- 양토산업- 지구조성 - (6:4)
- 수출 전력 100억\$ 미만(원료 ?)
-
- **중소기업 : 최대애로 ?**
- **생산은 할 수 있는데**
- **팔 곳이 없다**
- **왜 ?? 소비자가 (브랜드 신뢰도)**

베트남 중국 인니 태국 사우디 등 해외소비자 입을 수 ??



신선식품분야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팔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가

- 국내시장 안계상황, 해외수출 안계
- K-POP과 드라마를 유인원으로
- Ethnic (Food) Industry !! 공략
(예; 인도뱅글, 중국안쪽, 알랄, 동남아 민족별)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돌파구 용 도구 !!



원본_Klive_SolutionVer_0312_En.a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On-Line 판매(SNS 등)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국가별 선호 K-POP

- 나라별로 좋아하는 가수
 - 중국: 에프엑스, 신화 (별에서온그대: 김수현전지연. **시맥**)
 - 대만: FT아일랜드,
 - 필리핀: 2NE1,
 - 인도:엑소
 - 홍콩,멕시코,말레이시아: 샤이니,
 - 태국 : 김수연도 인기(빅뱅, PSY)
 - 사우디:수퍼주니어
 - 북미영어권: 엑소,틴탑,샤이니
 - 유럽: 샤이니,B.A.P, 엑소
 - 일본: 김연중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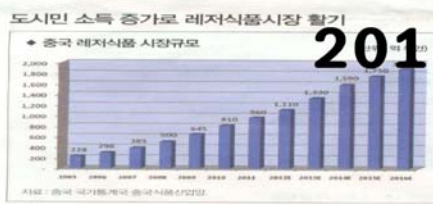
해외 신규시장

더바이어 THE BUYER 제212호 2014년 7월 1일 ~ 7월 14일
 www.withbuyer.com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HINCOM주필명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길 12 | TEL : 3487-7901~2 | 창간 2000년 2월 1일

중국, 레저식품시대 도래 일본, 요리 콘텐츠 식품수출 견인

2013년 22조 6천억원

2018년 81조 6천억원



도시민 소득 증가로 레저식품시장 활기
 레저식품은 여가, 휴식시간에 섭취하는 간식으로 전과류, 과실류, 당류 가공품, 젤리, 음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중국 소비자들의 레저식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유통방식도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레저식품 영업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새로운 시장 : Ethnic Food Markets

- 인도아(인도) 식품 1.8 T.\$
- 알랄 식품 1.44 T. \$(2.4 T\$, 와장품 0.5 T.\$)
- * 인도 농산물생산량 5.1억 톤/FAO/13.1억/2016
- * 중국 과실채소생산량 9.4억 톤/13.6억
- 인도네시아(2.7억)
- 베트남 (1억)
- 필리핀(1억)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비전 :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 국내 최초 다 부처간 협업(4개 부처)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청년들, 양질의 일자리

- 해외 물 근무 + 포장 + 유통 + 운영
- 청년일자리
 - 제조업 = 0.26명/억 포장산업 = 0.51명/억
 - 식품가공 = 0.30명/억
- 1차 식품 2차 공산품 수출 연결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시범사업 주체 추정예산 및 재정

사업: 농식품부(aT)+미래부+문화부+기재부

- **협력기관: 식품클러스터+포장약외; 수출용 포장**
 - - 국가별 적성품목 기호도, 법규 등 조사; aT, 전문기관
 - - 포장, 용기, 디자인(글씨) 개선, - 제품리메이킹 :
 - - 기호도 조사 후 리디자인(제품,포장,디자인)
- **총 500억원 추정**
 - - 3개국 6매장 : 인니, 베트남, 태국 국가별 2매장
 - - 국가별 1000개 품목 (인쇄비 80억)x3국= 240억
(인쇄비 품목당 1000만원; 80% 국고보조)
 - - Klive : 35억/매장x 6= 210억
 - - 운영위 등 50억
- **예산: 농특세**

2017 패키징 교육 - 산업의 이해 및 소재·기술 전망

사단법인 한국포장학회
Korea Society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각 분야의 임과 지에 압쳐

안국산 농식품(6차산업, 중소기업)

폭발적 니즈 해외만들어

우리청년에게 일자리를 !!

다 부쳐+다 기관 협업

Terima Kasih

谢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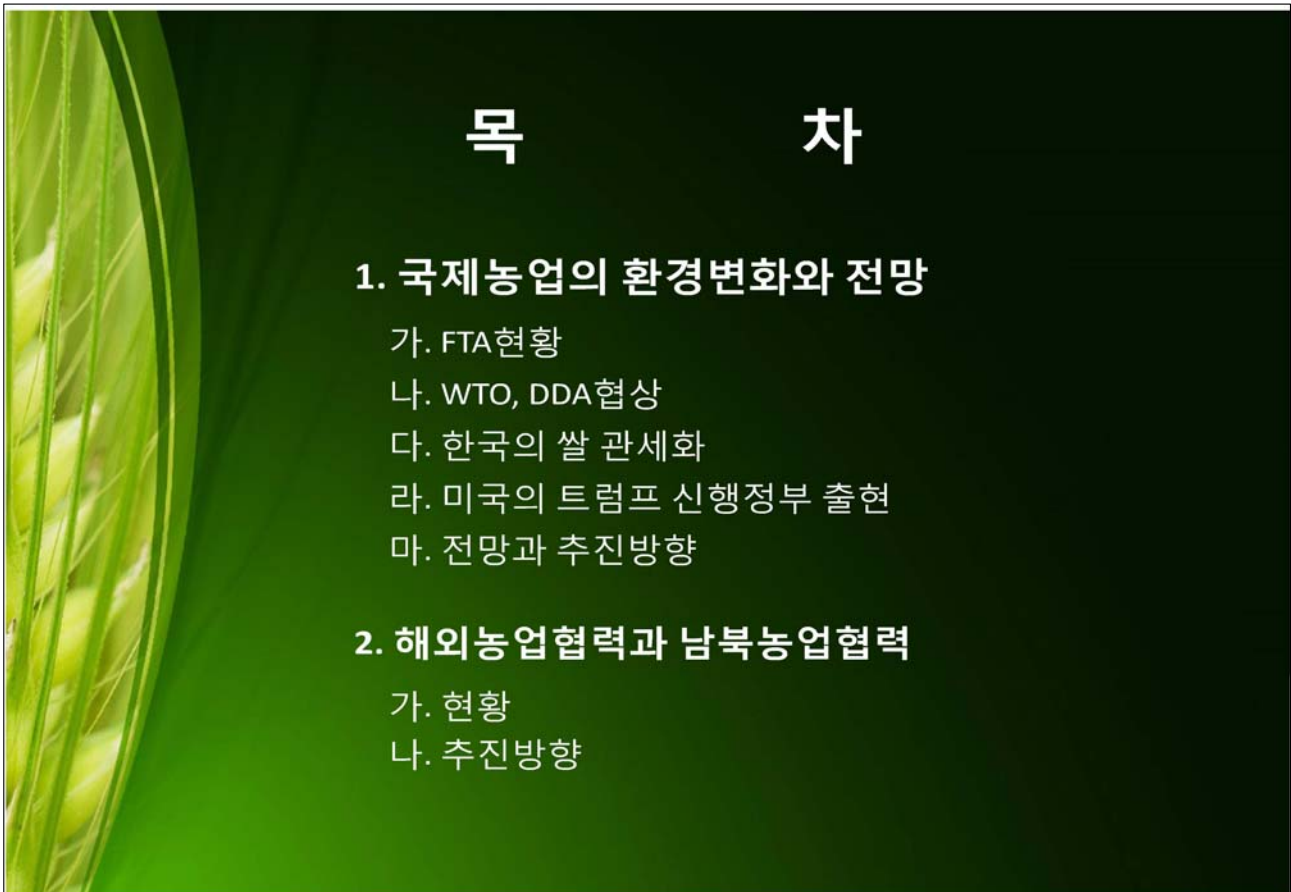
Cảm ơ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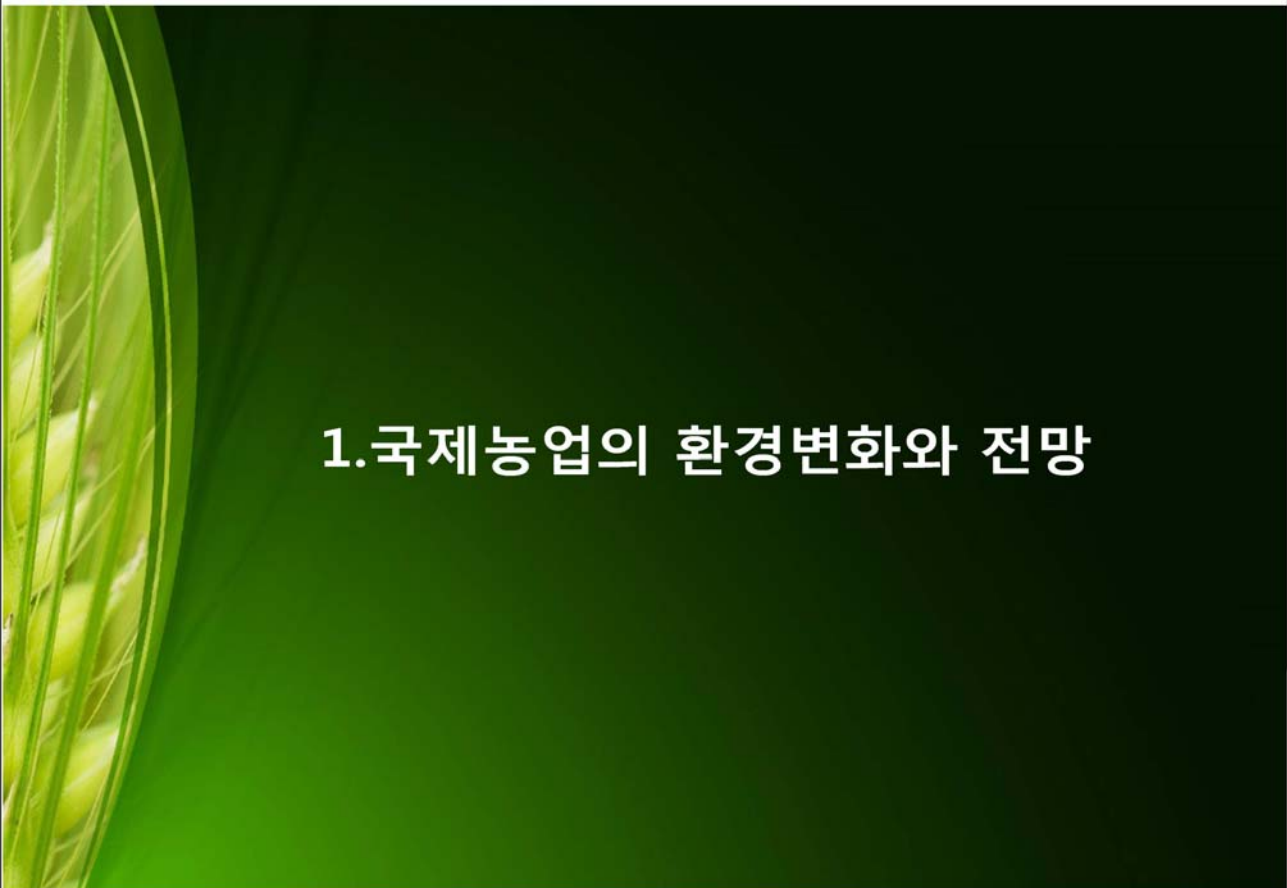
ขอบคุณค่ะ/ครับ

주제발표 5


국제농업협력과 남북농업협력







1.국제농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1.국제농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가. FTA현황

- 총 15건의 FTA 발효 중
(’15년 농산물 수입액의 82.4% 점유)
- 발효 15건 52개국
- 타결 1건, 한·중미 FTA(16.11.17) 후속조치 추진 중
- 협상진행 : RCEP, 한·중·일 FTA, 한·에콰도르 SECA,
한·이스라엘 FTA 등 4건
- TPP(환태평양 12개국 참여)는 미국의 철회로
모니터링 중

1.국제농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나. WTO, DDA협상

- 2001.11월 UR협상결과를 토대로 시장개방을 가속화 한다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 협상의제의 세분화, 선진·개도국 간의 견해차 등으로 큰 진전 없음
- 일부 소규모 합의도출
(2013.12 Bali 각료회의, 2015.12 나이로비 각료회의)

1.국제농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다. 한국의 쌀 관세화

- 93.12.15 UR협상결과 쌀의 관세화 유예
 - 10년간(95-2004) 1%~4%(205천 톤)의 MMA제공, 10년 후 관세화 유예 재협상 조건
- 2004관세화 유예 재협상 합의
 - 2005-2014까지 4.4%-7.96%(409천 톤)의 MMA제공
 - 국별 쿼타 합의 : 미국(5만 톤), 중국(11.6만 톤), 태국(3만 톤), 호주(9천 톤)
- 2014.9.18. 정부는 518% 관세로 WTO에 통보
 - 408천 톤은 국별 쿼타에서 Global쿼타로 제출
 - 동 양허표에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유보표명
 - 이의제기 철회까지 양자협의 진행 중

1.국제농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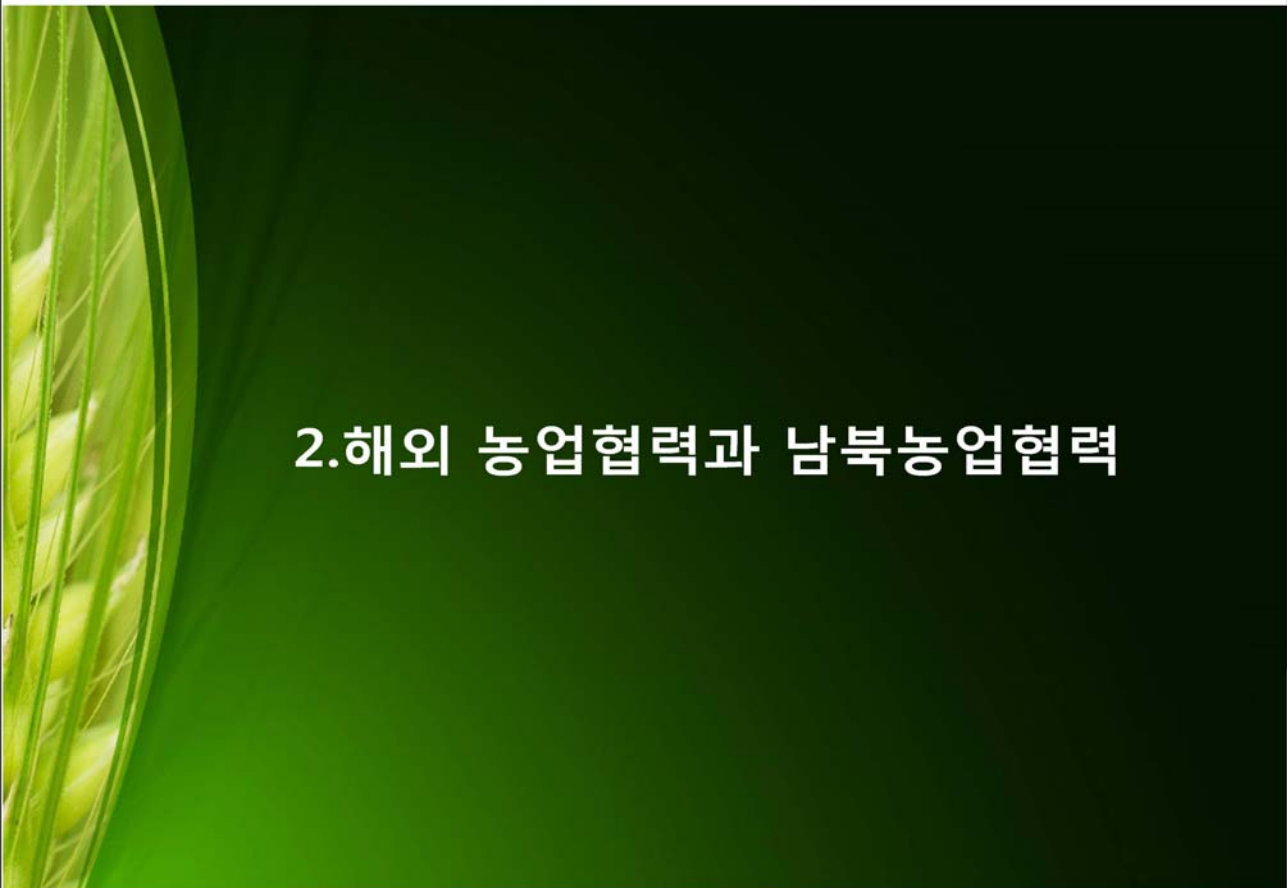
라.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현

- 월버로스 상무, 피터 나바로 NTC위원장,
로버트 라이트 USTR 등 강경인사로 통상요직 임명
-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등 FTA재협상을 언급, 실행
 - TPP는 가입철회 통보
 - NAFTA재협상, 한미FTA재협상을 통보


1.국제농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마. 전망과 추진방안

- 우리농업은 거의 대부분 국가와의 FTA체결로 농어업
부문의 지속적 피해가 예상
 - 보상 구조조정 등 지속적인 부문별 지원 방안 추진
- 미국의 FTA재협상에는 쌀과 쇠고기의 추가개방이
포함될 것이 예상
 - 한·미 FTA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2.해외 농업협력과 남북농업협력



2.해외농업협력과 남북농업협력

가. 현황

- 선진 한국농업기술의 해외진출이 필요
 - 일부 농기계, 농자재 등이 진출하고 있으나 적극적 지원이 필요
- 개도국과의 농업협력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가 필요
 - ODA사업 KOICA사업 등 적극 추진 중이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음
- 통일대비 불안한 식량안보 구축과 북한농업 개발을 위한 계획이 필요
 - 현재의 여건으로 남북농업협력에는 한계

2. 해외농업협력과 남북농업협력

나. 추진방안

- 해외농업개발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 민간부문의 해외농업투자 및 진출을 적극 지원
 - 해외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 참여를 제도화
 - 산발적인 대 개도국 농업개발 지원사업을 종합 추진
-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농업협력 Task Force를 구성하여 확고한 식량안보 구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